

개도국 민관협력(PPP) 사업의 이해

맹준호 | 경험기획실 정책연구팀 책임연구원

국내적으로 ODA 재원이 확대되고 개발협력 사업이 다양화됨에 따라 개발협력 이해관계자들 사이에 전통적인 민관협력(Public-Private Partnerships; PPP) 사업과 최근 다양한 방식(기업의 CSR 활동과 연계한 개발협력 사업 등)으로 민간이 참여하는 공공-민간협력(Public-Private Cooperation; PPC) 사업에 대한 개념과 이해가 혼재되어 있어, 민관협력(PPP) 사업에 대한 개념을 정리하고 최근의 공공-민간부문 협력 동향을 소개하여 對 개도국 민관협력 사업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한다.

주요 내용 ● ● ● ○

- ▶ 원조 패러다임의 변화와 개발자원 확보를 위한 국제사회의 움직임
- ▶ 민관협력(PPP) 사업의 개념 및 구성요건과 이를 통한 공공-민간협력(PPC) 사업과의 구분
- ▶ 국제사회의 최근 공공-민간부문 협력 동향
- ▶ 개도국 민관협력(PPP) 사업을 위한 시사점

1. 배경

■ 개발원조 패러다임의 변화

최근 국제사회는 새천년개발목표(MDGs) 달성을 위한 개발재원을 확보하려는 노력과 동시에, 한정된 개발재원을 보다 효과적으로 사용하여 개발효과성을 증대시키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국제사회 공동의 목표인 MDGs 달성 시한이 3년여 앞으로 다가 왔지만 개도국에서의 MDGs 성과는 예상보다 저조하여 현실적으로는 목표달성이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세계경제의 침체로 인해 개도국을 위한 공여국들의 공적개발원조(ODA) 재원이 과거에 비해 감소세로 돌아섬에 따라 국제사회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효과적인 공공-민간부문의 협력 방안 없이는 개도국의 실질적인 성장과 발전에 필요한 재원의 확보가 불가능하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으며, 이에 다양한 공공과 민간부문의 협력 방안이 최근 국제사회의 이슈로 부각되고 있는 상황이다.

많은 개발도상국의 경우, 고용창출과 소득증대를 가져오는 현지 기업 활동에 필요한 법·제도 및 인프라의 구축, 비즈니스 환경개선 등 다양한 개발 과제에 직면한 반면, 개도국의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공공부문 주도의 원조와 투자만으로는 가시적인 성과를 내기 어렵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이에 2011년 11월 부산에서 개최되었던 세계개발원조총회(HLF-4)에서는 개발협력에 있어 민간부문의 참여(민간부문과의 협력)가 주요 이슈로 논의 되었으며, 민간의 참여와 협력은 對 개도국 개발협력 사업의 지속가능성과 효과성 제고뿐만 아니라 우리기업의 對 개도국 진출기반 확보와 수출증진이라는 국익 차원에서 그 필요성이 점점 증대되고 있다.

■ 개발자원 확보를 위한 국제사회의 움직임

UN 등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1999년부터 개발자원(financing for development)의 확대 방안을 다각적으로 모색해 왔으며, 빈곤감소를 위한 중점 개발과제를 도입한 세계은행 주도의 PRSP¹⁾는 수원국 중심의 개발계획과 함께 정부 이외의 새로운 개발 주체들과의 협력을 통한 개도국의 빈곤문제 해결 방안을 도입하였다. 이는 개도국 개발에 필요한 자원과 전문성 및 효과성을 중시하는 패러다임의 전환으로 개발원조에 있어 시장 메커니즘을 통한 민간부문 참여의 중요성이 증대된 것이라고 볼 수 있겠다. 또한 2002년 멕시코 몬테레이에서 있었던 UN개발재원회의에서는 개도국의 빈곤감소와 경제성장을 달성하기 위한 인프라 구축의 중요성과 함께 개발재원의 주요 확보 방안으로 민간부문의 참여(Private Sector Participation) 및 민관협력(Public-Private Partnerships; PPP) 방안이 강조되었다.

국제사회의 공공-민간부문 협력방안 논의의 핵심은 개발자원 확대를 위해 민간의 참여가 늘어난다면 개도국의 경제성장과 빈곤층의 경제활동 참가 기회의 확대 및 이를 통한 궁극적인 개도국의 빈곤감소 등 국제사회가 추구하는 개발목표의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보았고, 이에 선진 원조기관에서는 민간부문과 함께 개도국의 민간부문 개발을 위한 지원을 강화하고 있는 추세이다.

■ 국내적 논의 동향

최근 개발협력에 있어 민간자본 투자를 위한 ODA의 촉매적 역할이 강조되고 있는데, 우리 정부는 2010년 '국제개발협력 선진화방안'의 일환으로 국제개발협력 기반 확대를 위한 정책목표를 설정하였으며, 국제사회와 보조를 맞추어 개발협력에 있어 민간부문과의 협력을 확대해 나갈 계획을 선진화 방안에 포함시킨 바 있다. 다만 국내적으로 ODA 재원이 확대되고, 개발협력 사업이 다양화됨에 따라 개발협력 이해관계자들 사이에 전통적인 민관협력(PPP)과 공공-민간협력(Public-Private Cooperation; PPC)에 대한 개념과 이해가 혼재되어 있기에, 이후의 글에서는 對 개도국 개발협력 사업에 있어 민관협력(PPP) 사업에 대한 개념을 먼저 정리하고, 국제사회의 공공-민간부문 협력 동향을 간략하게 조명하여 PPP 사업의 본질과 향후 對 개도국 민관협력 사업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해 보고자 한다.

1) PRSP(Poverty Reduction Strategy Paper) : 1999년 IMF—세계은행 총회에서 제의된 개도국 빈곤퇴치 전략으로 개도국이 직면한 빈곤의 원인을 분석하고 빈곤퇴치를 위한 거시적 구조조정 및 제도개혁 등의 기틀을 정리한 국별전략문서이다.

2. 민관협력(PPP) 사업의 개념 및 요건

■ PPP에 대한 개념 형성

PPP에 대한 개념은 경제성장 과정에서 인프라의 구축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 전통적으로 인프라는 공공 부문에 의해 공급되어 왔는데, 개도국 경제성장을 위한 인프라에 대한 수요는 빠르게 증가하는 반면, 개도국의 공공사업은 개도국 정부의 재정능력의 한계와 거버넌스의 취약성으로 인해 많은 문제점들을 야기하곤 했다. 한 국가의 개발과정에 있어 적절한 인프라의 공급은 생산성 향상과 생산비용 절감에 도움이 되므로 경제 성장을 견인할 수 있는 인프라의 확충이 필수적 요소인데, 정부가 그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는 부분에 있어서 민간이 정부를 대신하여 효과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개념이 PPP의 출발점이다.

공공인프라 구축을 위한 민간의 참여를 촉진하게 되면 부족한 재원확보가 가능할 뿐만 아니라 민간의 기술과 경영기법 등을 통해 보다 낮은 가격에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공공부문이 제공 하던 인프라 등의 공공서비스를 공공과 민간이 협력하여 제공하기 시작하게 되었고, 1980년대 말부터 민영화 및 경쟁원리에 의한 공공서비스의 제공이 확산되면서 1990년대에 들어서는 민간의 참여에 의한 인프라 프로젝트가 크게 증가하게 되었다. PPP를 통해 정부는 부족한 재원을 민간을 통해 충당할 수 있었고, 민간은 대규모 인프라 구축 사업에 수반되는 수익에 대한 우려와 위험부담으로 인해 단독으로 시행하기 어려웠던 프로젝트를 현실화할 수 있다는 양쪽의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진 사례라고 볼 수 있다.

■ PPP의 본질적 개념 및 정의

현재 개발협력에 있어 민관협력이라는 용어는 다양한 방식으로 해석되고 있지만, PPP의 본래적인 의미는 공공부문에서 제공해야 하는 공공서비스를 민간에서 제공하는 방식을 의미하며, 이는 개도국의 경제상황과 경제발전 정도에 따라 사회간접자본 확충에 있어 공공과 민간의 역할분담 정도를 의미하는 것이다. 최근에는 PPP를 인프라 사업으로만 한정하지 않고 공적자금과 민간재원이 함께 투입되는 개발협력 사업을 보다 광범위한 의미에서 민관협력(PPP)이라는 용어로 사용하기도 하나, 개도국에서 수행되는 PPP사업의 대부분은 인프라 자산(asset)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로 개발협력에 있어서 PPP는 자원조달 측면에서 수익성이 낮은 개도국의 인프라 사업에 민간자금이 참여하는 경우가 주류를 형성하고 있으며, 최근 논의되고 있는 광의의 PPP는 PPP의 본질과는 다소 거리가 있어 보인다. PPP에 대한 보다 정확한 개념 정립을 위해 주요 기관들의 PPP에 대한 정의를 OECD 자료를 통해 살펴보면 아래의 <표 1>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

<표 1> 주요 국제기구 및 선진공여국의 PPP에 대한 정의

주요기관	PPP 개념
OECD	정부(서비스제공)와 민간(수익)의 목적이 일치하는(이해관계의 접점이 있는) 사업에서 민간부문이 서비스를 제공하고 위험을 분담
ADB	인프라 및 인프라관련 서비스 제공에 있어 공공-민간의 협력을 말하며 민간은 위험분담을 통해 비용을 최소화
IMF	경제·사회부문 인프라 프로젝트 수행 시, 민간이 인프라를 제공하고 정부는 인프라 사업에 수반되는 위험을 민간으로 이전
EC	공공부문과 기업이 협력하여 인프라 건설과 개선 및 관리유지 서비스를 제공
일본	민관협력을 통해 개도국에서 활동하는 일본기업의 위험부담을 경감하고 ODA 등 공적자금 투입으로는 성과를 거두기 어려운 고용, 기술, 무역 및 투자를 촉진
영국	공공부문이 재원을 조달하고 민간부문은 발생 가능한 위험을 부담

자료: OECD, Public-Private Partnerships: In Pursuit of Risk Sharing and Value for Money (20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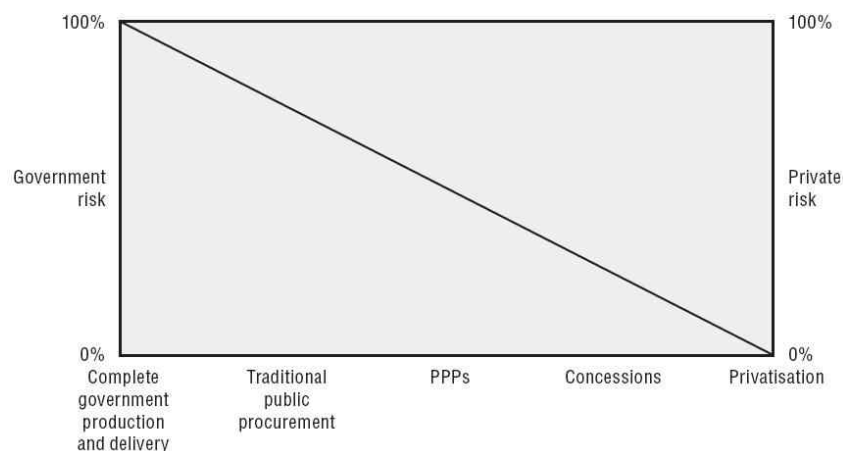
<표 1>의 개념들을 정리해 보면, 민간이 정부를 대신하여 인프라, 자산,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사업 수행 시 발생 가능한 위험을 분담하되, 이를 통해 공공과 민간이 각자 소기의 목적(공공서비스의 제공과 수익)을 달성할 수 있는 메커니즘이 PPP라고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 PPP 구성 요건

PPP에 대한 개념은 기관별·국가별로 약간씩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PPP와 PPP가 아닌 공공과 민간의 협력은 PPP의 정의로부터 PPP사업의 필수적인 구성요건을 살펴봄으로써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PPP의 구성요건으로는 첫째, 공공부문이 제공해야 하는 인프라 또는 공공서비스를 민간이 대신 제공해야 하며, 둘째,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이 양자간 어느 정도의 위험을 분담(risk-sharing)하거나 공공부문으로부터 민간부문으로 위험이 이전(risk transfer)되는 것을 수반하는 요소가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따라서 위에서 언급한 개념과 PPP사업의 특성에 따르면, PPP라고 분류되는 민관협력 사업은 아래 <그림 1>에서와 같이 정부의 독점적 지원과 민영화 사이의 중간 정도의 선상에 위치하는 것이 일반적인 형태라고 할 수 있겠다.

<그림 1> 위험부담과 서비스제공 방식에 따른 공공-민간참여 조합의 스펙트럼



자료: OECD, Public-Private Partnerships: In Pursuit of Risk Sharing and Value for Money (2008)

■ PPP와 PPC의 구분

앞서 최근 개발협력에 있어 민관협력(PPP)이라는 용어가 본래의 의미보다 더 다양하고 넓은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는데, 이는 용어사용의 문제로서 다양한 형태의 공공과 민간부문의 '협력'이라는 단어를 번역하는 과정에서 생긴 개념의 혼재²⁾로 보인다.

2) 일부의 글(KOICA, 2012)에서 PPP의 개념을 정리하면서 경제발전에 있어서의 PPP와 개발협력에 있어서의 PPP의 개념을 구분하여 소개하고 있고, 무상원조의 경우 기업의 사회공헌활동(CSR)과 융합한 형태를 일반적인 PPP형태로 언급하고 있는데, 이는 PPP의 개념을 보다 넓은 의미에서 다양하게 해석한 것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위에서 언급한 PPP(Public-Private Partnerships)의 구성요건과 대입해 볼 경우, PPP의 의미 보다는 PPC의 의미에 더 가까워 보인다. 최근 인프라 구축과 같은 공공사업 이외에도 기업의 사회공헌 활동이 새로운 개발수단으로 조명을 받고 있기는 하지만, 국내 기업의 CSR 활동은 기업의 홍보 성격이 강하며 활동범위 역시 봉사활동 수준에 머물러 있고 국내 기업의 CSR활동에는 PPP의 구성요건인 risk-sharing 요소가 없어 이를 PPP로 분류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따른다. 또한 공공(ODA)과 민간(CSR)의 협력목적(공공서비스 제공과 이윤추구)이 일치하는 접점을 찾아내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무상 ODA와 기업의 CSR활동 연계가 다른 의미에서의 공공-민간협력(PPC) 방안일 수는 있어도 PPP의 본질과는 분명 거리가 있으며, ODA와 CSR의 연계가능성도 여러가지 제약조건으로 인해 기업의 입장에서는 높게 보고 있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이희진 외, 2008)

실제로 OECD의 개발협력국(Development Cooperation Directorate; DCD)은 민관협력 *빌딩블럭(BB)*³⁾에서 다양한 형태의 민관협력을 PPP라는 개념과는 다르다는 의미에서 공공-민간협력(Public-Private Cooperation; PPC)으로 표현하고 있으며, 미국의 양자 원조기관인 USAID는 민관협력 프로그램인 GDA (Global Development Alliance)를 운영하면서 공공-민간연대(Public-Private Alliance; PPA)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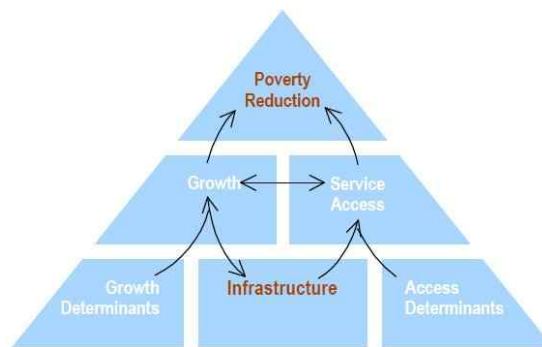
개발협력 사업에 있어 공공-민간협력이 다양한 방식으로 진화하고 있으나, 내용적으로 성격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정확한 구분 없이 모든 형태의 공공-민간협력을 광의의 PPP로 표현하는 것은 우리말 표현으로 모두 '민관협력'으로 번역되어지는 용어사용의 특성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며, 이에 국내적으로도 개발협력 이해관계자들 사이에 서로 다르게 사용되고 있는 PPP의 개념을 명확하게 정리하여, 인프라 관련 민관협력은 전통적인 의미에서의 PPP로, 그 이외에 보다 넓은 의미의 공공-민간협력은 PPC로 용어를 통일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3. 국제사회의 공공-민간부문 협력 동향

■ 최근 동향 및 지원 분야

최근 국제사회에서는 다양한 방식으로 공공-민간부문 협력 방안이 진화되고 있는데, 논의의 핵심은 <그림 2>에서와 같이 인프라 정비를 통한 개도국의 빈곤감소이며, 이와 더불어 개도국의 민간부문 개발을 위해 필요한 *투자 환경 조성*⁵⁾에 논의의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개발도상국의 인프라 부족 현상은 개도국 국민의 기본적인 니즈(needs)의 충족과 개도국 민간부문의 발전, 그리고 국제사회가 목표로 하고 있는 MDGs 달성에 주요한 장애요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국제사회가 해결해야 할 *공통의 과제*⁶⁾로 인식되고 있는 것이다.

<그림 2> 인프라 투자와 경제성장, 빈곤감소의 상관관계



자료 : World Bank, Connecting East Asia; A New Framework for Infrastructure (2005)

또한 개도국 민간부문 개발을 위한 투자환경의 조성은 경제·사회 인프라 구축 지원을 포함한, 개도국의 정책 및 법체계 구축, 민간의 역량개발 및 효율적인 시장 형성 등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대규모의 인프라 구축 지원 및 민간기업 직접지원의 경우 원조기관들은 대부분 Loan이나 Fund를 조성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법·제도 개선, 역량개발 등 기술지원의 경우는 Grant를 통해 지원하고 있다.

3) 부산에서 개최되었던 제4차 세계개발원조총회에서 특정한 개발 이슈들을 논의하기 위해 만들어진 이해관계자들 주도의 자발적 모임으로 기후금융, 공공-민간협력, 남남협력 등 총 8개의 빌딩블럭이 형성되었다.

4)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Foreign Assistance: Public-Private Partnerships (PPPs). CRS Report for Congress (2011)

5) DCED, Supporting Business Environment Reforms (20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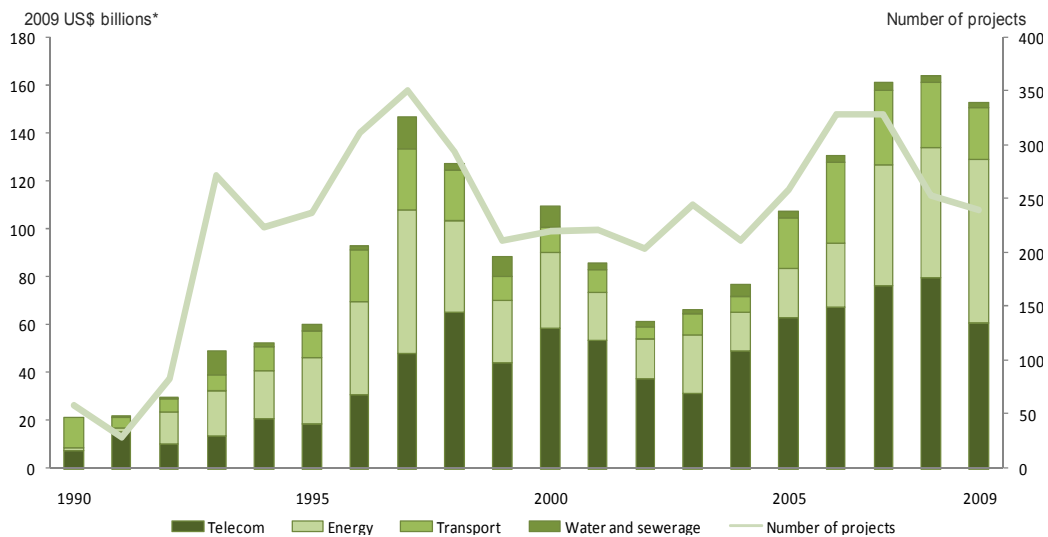
6) 2000년 뉴욕에서 개최되었던 UN 밀레니엄 정상회의에서는 국제사회가 목표로 하는 UN 밀레니엄 선언과 개도국의 인프라 정비를 연계하는 문제가 논의되었는데, 이는 인프라 구축이 MDGs 달성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를 국제사회가 공통의 과제로 인식한 회의라고 할 수 있다. (최민경, 2008)

가. 경제·사회 인프라 구축 지원

■ PPP 방식을 활용한 경제·사회 인프라 구축이 중점

최근 국제사회의 對 개도국 인프라 지원 논의의 핵심은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인프라 구축과 빈곤감소의 연계 (pro-poor infrastructure development)이며, 인프라 구축 PPP가 MDGs 달성 및 개도국 경제성장에 있어 미칠 수 있는 긍정적 역할에 대한 기대가 증대되고 있다. <그림 3>에서 보듯 2000년대에 들어 개도국에 대한 인프라 PPP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개도국에서의 대규모 인프라 구축사업 수행 시에 PPP방식이 적극적으로 이용되고 있음을 나타내 준다. 개도국에 대한 인프라 구축은 MDBs와 양자 원조기관들이 주로 차관 지원을 통해 PPP방식으로 지원을 하고 있고, 다수의 기관이 참여하는 Multi-agency PPP Initiative (MPI)⁷⁾의 형태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그림 3> 개도국에서 진행되는 PPP 사업에 대한 승인 실적, 1990-2009



자료: World Bank and PPIAF (2012)

나. 투자환경(Business Environment) 개선 지원

■ 민간자금 유입을 위한 개도국 현지 투자환경 조성

개도국은 여러가지 제약요인들로 인해 민간투자를 충분히 유인하지 못하고 있으며, 특히 인프라의 부족과 취약한 법·제도 체계는 개도국에서의 투자에 대한 리스크와 비용을 높이는 걸림돌이 되고 있다. 이에 공공-민간협력을 통해 개도국의 불안정한 정치적·제도적 개혁을 시행하고 민간이 예측 가능한 방향으로 정부의 정책이 형성될 수 있도록 투자환경을 조성하여 리스크를 줄이고 생산성을 높이도록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예를 들면, 현재 OECD는 기관의 정책전문성을 활용하여 개도국 민간투자 촉진을 위한 국제사회의 규범을 제시하고 있으며, JICA, DFID, Danida, Norad 등 다수의 양자 원조기관 및 World Bank, ILO, UNDP 등의 국제기구가 개도국 투자환경 조성을 위한 무상 기술협력 사업을 지원 중이다.

7) MPI의 예시로는 영국의 Private Infrastructure Development Group 등이 있으며, KfW, IFC, DFID, SECO, MFA, Irish Aid 등의 원조기관이 참여하여 아프리카 지역의 인프라 개발을 지원하고 있는데, 인프라 지원 시 외화 및 현지 통화를 사용하며, Loan, Guarantee, Equity 등 다양한 방식을 동원하여 지원하고 있다.

다. 민간부문 개발(Private Sector Development) 지원

■ 민간기업 앞 직접 금융지원 및 투자자문 등 기술협력 지원

국제사회의 원조는 개도국이 개발원조에서 벗어나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이를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민간부문 개발을 통한 자생적인 경제성장이 필수적인 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 동 부문은 다수의 원조기관이 다양한 initiative를 구성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빌 & 멜린다 게이츠 재단과 같은 민간재단의 참여도 눈에 띄는 부분이다. 다자-분야별 이니셔티브의 예시는 아래 <표 2>와 같다.

<표 2> 다자-분야별 이니셔티브의 예시

기관	프로그램	내용
다자기관 이니셔티브	Africa Enterprise Challenge Fund (AusAID, DFID, Sida 등)	농업분야 지역 시장개발 지원 (Loan, Grant)
	Business Call to Action (AusAID, DFID, USAID, UNDP 등)	MDGs 달성 위한 관련분야 기술협력, 정책제안
	Agresults (AusAID, CIDA, 게이츠재단 등)	농업생산성 제고를 위한 기술지원 (Grant)
BMZ/GIZ	DeveloPPP.de	민간기업 위험관리 기술지원 (Grant)
DFID	Business Innovation Facility	민간기업에 비즈니스자문 및 정보제공 (Grant)
Norad	NORFUND	민간창업 지원 (Grant)

자료: 필자 정리

4. 시사점

■ 지난 10년간 개도국에 대한 공여국의 ODA는 크게 증가하였으나 개도국의 급증하는 개발수요를 공공부문만이 감당하기 어려워진 현실로 인해 개발협력 사업에 있어 민간의 참여 논의가 확대되고 있다. 실제로 DAC 회원국의 ODA는 순지출 기준 2000년 약 540억 달러에서 2010년 1,285억 달러로 크게 증가하였고, DAC 회원국의 국민 1인당 ODA는 약 61 달러에서 134 달러로 두 배 이상 증가하였으나 세계 경제의 침체 등으로 인해 추가적인 자원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보다 효과적인 개발협력 사업을 위해서는 공공과 민간의 협력 방안이 가시적인 대안으로 등장하게 되었다.

■ 개도국은 민간의 투자를 유인하고 경제활동을 지속할 수 있는 물적·인적 인프라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를 극복하기 위한 개도국의 민관협력(PPP)사업은 인프라 구축이 중심이 되고 있다. 개도국에 투입되는 ODA의 상당 부분이 민간투자를 더 많이 유치하기 위한 활동에 쓰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도국의 취약한 인프라 환경과 불안정한 정치적 상황, 투자환경 조성을 위한 법·제도적 장치의 미비 등으로 인해 민간투자 유치가 쉽지 않은 현실인데, 개발도상국의 지속가능한 개발과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투자→생산→성장→투자로 이어지는 선순환 고리의 형성이 중요하므로 열악한 인프라와 이로 인한 낮은 생산성이 만성적자와 경제성장 둔화로 이어지는 개도국의 저개발 순환고리를 차단하기 위해서도 빈곤감소를 가능케 하는 인프라의 구축이 중요하다.

- 또한 공공재원인 ODA가 민간의 투자를 촉진하는 레버리지로 활용될 수 있도록 개도국에 대한 다양한 지원방안을 강구하되, 부족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한 민간과의 협력 방안을 모색하고, 개도국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인프라 지원 PPP를 강화하여 개도국의 민간부문이 성장할 수 있도록 ODA가 개도국 인프라 구축의 촉매적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한다.
- 민간투자를 더 많이 유인하고 잘 활용하기 위해 ODA는 개도국의 투자환경을 개선하고 개발사업 시행 시 직면하고 있는 여러 과제들을 해결해야 하는데, 최근 국제사회의 공공-민간협력 사례에서 보듯 인프라 PPP지원 및 유럽 각국이 운영하는 지분투자 전담기구의 설립이나 개도국 지원의 포트폴리오를 다양화하기 위한 보증제도 도입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개도국 지원을 위한 공공-민간협력 수단을 확대하는 방안을 국내적으로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국내>

- 곽재성 (2012), 국제개발과 민관협력, 이슈와 정책제언, 국제개발협력 2012 No.1. 한국국제협력단.
- 곽재성 외 (2011), 효과적인 공공-민간파트너십 사업모델 연구. 경희대 국제대학원, 한국국제협력단.
- 박예지 (2012), 개발을 위한 민간 참여와 ODA의 역할. 한국의 개발협력 2012 No.1. 한국수출입은행.
- 이희진 외 (2008), 공적개발원조(ODA)와 민관협력(PPP): 국내기업의 글로벌 CSR과 ODA연계.
- 최민경 (2008), 우리나라 개발원조의 민관협력 활성화 방안. 한국국제협력단.
- 최정훈 (2012), 국제 민관협력(PPC) 형태와 EDCF 참여방안.

<국외>

- ADB (2005), Public-Private Partnership Handbook.
-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2011), Foreign Assistance: Public-Private Partnerships (PPPs). CRS Report.
- DCED (2008), Supporting Business Environment Reforms: Practical Guidance for Development Agencies.
- HLF-4 on Aid Effectiveness (2011), Expanding and Enhancing Public-Private Cooperation for Broad-based, Inclusive and Sustainable Growth.
- OECD (2008), Public-Private Partnerships: In Pursuit of Risk Sharing and Value for Money.
- World Bank (2005), Connecting East Asia; A New Framework for Infrastructure.
- World Bank Institute and PPIAF (2012), Public-Private Partnership Guide: A Reference.